

**Vol. 9**

2021.09.15.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545-5115

F. 02-3444-5115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mailto: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mailto: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정인전임 [jjpark@hjcustoms.co.kr](mailto:jjpark@hjcustoms.co.kr)

##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조세심판원 사례

III.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I. 법령 개정사항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 (1) 개정 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정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로 정의함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 시에도 현지 실사 거부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위해 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한 과태료 근거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등 불이행 시 과태료 근거를 신설함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정보 공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과징금 상한액 상향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함

## (3) 시행일

’21.08.17.

## I. 법령 개정사항

###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1) 개정 이유

현행법에서는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 등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적 처분권 행사 근거 명시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

#### (3) 시행일

'21.08.17.

## I. 법령 개정사항

## 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회수·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판 후 조사 관련 규정 개정	1) 기존 재심사를 절차의 성격에 따라 '시판 후 조사' 및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분리하여 규정
	2) 시판 후 조사 대상에 시판 후 조사 중인 선발의료기기와 동등한 후발 의료기기를 추가
	3)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신개발의료기기는 시판 후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조사기간 기준일을 제조회가일에서 시판일로 변경
조치명령 유형 추가 및 요건 완화	1) 위해 의료기기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유형에 회수·폐기·공표명령 외에 판매중지를 추가
	2) 조치명령 대상 의료기기 요건을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 및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로 완화함

##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미갱신 유효기간 경과 의료기기 수입 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마련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조항은 삭제함
갱신 받으려는 의료기기의 변경 조건	갱신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허가 등의 변경을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
유효기간 지정 기간 변경	법률 제1724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기간 지정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

## (3) 시행일

'21.08.17.

## I. 법령 개정사항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  
법예고

## (1) 개정 이유

안전관리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위 명확화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일부 또는 전부) 규정 보완	안전인증 신청서 서식에 KS인증 보유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KS인증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이 면제됨을 안내문구로 추가

## I. 법령 개정사항

###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 위탁 내용 신설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 위탁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위탁
과태료 상한액 조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

## I. 법령 개정사항

##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수입수산물에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문서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변경등록 및 신고 기한 명확화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지 30일 내에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수입판매업자의 특별관리영업자 지정·운영 가능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위생증명서 제출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 시에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정보공개범위 확대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제품명·해외제조업소 외에도 수입신고인을 추가하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우수수입업소 등록자의 서류 검사 생략 기준 완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 한 경우 서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수입실적 요건을 “연평균 5회”로 완화



## I. 법령 개정사항

## 7.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상한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참여 부처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종전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회의 참여부처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규정	약사법 개정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처분기준 규정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에페드린 주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 II.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품을 HSK 제9504.50-9000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로 분류하지 않고, HSK 제8526.92-0000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또는 "000"을 수입하면서 '비디오게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 9504.90-9090 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0.10. 쟁점물품에 대한 2019.7.5.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이를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보아 HSK 제 8526.92-0000 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회신에 따라 2019.11.6.부터 2019.11.26.까지 쟁점물품을 HSK 제 8526.92-0000 호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4.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 9504.50-9000 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0. 및 2020.6.15. 이를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인용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 9504.50-9000 호가 아닌 HSK 제 8526.92-0000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는 본체 및 주변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서포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는 쟁점물품을 본체에 탈·부착 하여 사용하는 방식 등이 소개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유·무선방식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2) 사용자들의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쟁점물품 구성품의 원가비율 등을 보더라도 사용자들의 휴대모드와 거치모드의 사용 빈도가 비슷하고, 구성요소별 원가구성비에서도 유선전용 원가비율이 무선전용 원가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선방식을 쟁점물품의 주요한 특성으로 한정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3) 결정일

2021.07.27 (조심 2020 관 0150)

## II. 조세심판원 사례

### 2.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쟁점판매자”와 무선통신용 기기 부분품인 000 및 000 등(이하 “쟁점양산제품”이라 한다)의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000 달러(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해당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아니한 임의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함.

나. 청구법인은 2020.11.03.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아, 2020.11.20. 처분청에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후,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1)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각 쟁점계약서 제 6 조에서 납기 이내에 ‘계약제품’의 납품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7 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 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2)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국내 양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개발 및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3) 결정일

2021.07.27 (조심 2021 관 0044)

## II. 조세심판원 사례

3.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 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주)CCC(대표이사 AAA,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000 장은 2020.1.10. 체납법인의 신고납부세액을 조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

나. 체납법인의 지분은 2017.4.10. AAA 40%, 청구인 및 BBB 각 30%로 변동되었으나, 처분청은 AAA 과 청구인 및 BBB 가 특수관계(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이 2017.5.4.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번호 000 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지분(30%)에 따라 안분한 관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인용 (부과처분 취소)

다음의 사유에 따라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 「관세법」 제 19 조 제 9 항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 39 조는 주주 1 명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이들에게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및 제 1 조의 2 제 2 항은 본인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를 경제적 연관 관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BBB. AAA 은 모두 체납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일 뿐 해당 주주인 청구인과 BBB. AAA 이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2)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보유 비율이 30%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과 BBB. AAA 을 「국세기본법」 제 39 조 제 2 호의 과점주주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

### (3) 결정일

2021.08.12. (조심 2021 관 0004)

## II. 조세심판원 사례

4.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주)AAA(대표이사 BBB,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4.14.부터 2016.11.10.까지 수입신고번호 000 건으로 000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000 장은 2020.1.9. 체납법인의 신고납부세액을 조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견됨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해당 부족세액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

나. 체납법인의 지분은 당초 청구인 100%에서 2016.3.30. 청구인 45%, CCC 30% 및 DDD 25%로 변동되었으나, 000 장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이관받은 처분청은 2020.8.26. 체납법인의 지분변동이 주식 허위 양수도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여전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 000 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45%만 보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주와 가족관계도 아니고 또한 특수관계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 39 조 제 2 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 45%는 CCC 및 DDD 와의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여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지분 100%가 45%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2) 청구인은 「관세법」 제 19 조 제 9 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 39 조 제 2 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3) 결정일

2021.08.12. (조심 2021 관 0005)

## II. 조세심판원 사례

### 5.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 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청구법인은 2019.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이하 “당초사후적용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9., 2019.12.5. 및 2019.12.17. 이를 각각 거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함.

나. 청구법인은 2020.9.3., 2020.9.16. 및 2020.9.17. 관세청 “UNI-PASS”로 경정청구를 제기(이하 “2 차 경정청구”라 한다)하였으나, UNI-PASS 에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미제출 및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 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받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10.27. 처분청에 “쟁점사후적용 신청”하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쟁점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7. 및 2020.11.2.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 당초사후적용 신청시 처분청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이를 갖춘 상태에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적법하게 각하하였다는 점
- 2)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하고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기 위한 불복 제기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이 통지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 3)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선행처분일로부터 약 10 개월 내지 11 개월이 경과한 2020.10.27.(수입신고수리일부터 1 년이 경과한 시점이다)에 이르러서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다는 점

#### (3) 결정일

2021.08.19. (조심 2021 관 0011)

###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1.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현재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간의 관세동맹

한-메르코수르 TA는 '18.9월 첫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5차 협상 이후 코로나 19 확산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최근 1년 4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하여 6차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한 바 있음(6.1~6.4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한-메르코수르 TA는 남미 신흥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메르코수르와의 교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또한, “향후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코트라 배상범 상파울루 무역관장은 핵심 부품·원료 수출, 프로젝트 참여 등 브라질 시장 진출 가능성과 브라질 경제 현황 및 주요 유망 산업에 관한 발표를 진행함. 브라질은 자동차 부품, 의약품 수요가 크며, 최근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항공, 방산 등 프로젝트를 다수 발주하고 있음.

한-메르코수르 TA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 메르코수르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하며, 우리 기업의 대(對)브라질 투자 진출 확대 가능성이 큼.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메르코수르 TA 타결 필요성, 한-메르코수르 간 협력 유망 분야, 메르코수르 진출 애로사항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남미 지역 성장 잠재력과 시장선점 필요성 감안시 한-메르코수르 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남미 지역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한-메르코수르 TA 체결시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역내 통일된 원산지 규범 도입, ▲비관세장벽 해소, ▲지식재산권 등 역내 규범 수준 제고 및 우리 기업 권리보호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한다고 언급함. 이달 말 한-메르코수르 TA 7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8.30~9.3일)이며, 양측은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역·투자 다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흥시장과의 FTA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FTA 추진 과정에서 업계를 포함한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것임.

---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관세청공지, 2021. 8. 13.]

□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인정범위

-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 ②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3. 한국 · 터키,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체결

- ✓ 2021.8.12일 한국은행과 터키중앙은행은 양자간 자국통화(원화-리라화)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금액은 2.3조원/175억리라(20억달러 상당)이며 계약기간은 3년(만기가 도래하면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 한·터키 통화스왑은 양국의 교역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체결
- ✓ 양국은 교역 등 실물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 향후에는 통화스왑을 활용해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추진경과] 한국은행과 터키중앙은행은 2020년부터 통화스왑 체결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한국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터키중앙은행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21.8월 통화스왑 체결에 최종 합의

#### [한국과 터키 간 관계]

##### (터키 경제)

- 터키는 유럽 ·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 많은 인구, 역내 영향력 등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세계 최대구매력을 보유한 EU 시장(1995년 관세동맹 체결)이 배후에 있고 인구(약 8천만명)가 유럽 ·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준; 터키 정부가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 및 전기 · 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세계적 기업들이 EU 지역 수요에 대응한 생산공장을 터키에 이전; 터키 경제는 2020년 COVID-19 위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유지하였으며 금년 들어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 실업률도 점차 개선되고 정부부채도 대체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 다만 대외부문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액도 크지 않아 취약성이 큼
- 터키는 우리나라와 G20, OECD 등 국제포럼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음; 터키는 한국전쟁 주요 참전국이며, 반세기 이상 장기간 협력을 바탕으로 2012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무역 · 투자 부문)

- 우리나라와 터키는 FTA를 체결(2013.5월 발효)하고 있는 주요 교역 상대국(2020년 68.6억달러)이며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3년 FTA 체결 이후 양국간 무역규모가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터키에 각종 중간재를 공급하고 터키는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관계에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은 터키를 유럽 ·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여 꾸준히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참여

---

###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한국과 터키 간 관계]

- 교역관계에 한국은행은 기축통화국 등 선진국과는 위기대비 목적의 통화스왑을, 신흥국과는 평상시 경제·금융협력 증진 목적의 자국통화 통화 스왑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한·터키 통화스왑은 자국통화 무역결제 지원을 통해 양국 교역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
- 자국통화 통화스왑의 경우 달러화가 아닌 자국통화를 활용해서 무역결제 등을 지원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켜 간접적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4. 베트남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 발행 안내

최근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 [개요]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
- 베트남 측이 관세청 제안을 수용하여 시행지침 발표('21.8.17)

#####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C/O 원본 대신 사본(C/O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21.8.17.자 베트남 측 시행지침)
- ※ 베트남 세관은 필요할 경우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ustoms.go.kr/co.html](http://www.customs.go.kr/co.html))에서 우리나라 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이 발행한 C/O의 진위성 확인

##### [대상 협정]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 [시행 일자]

'21.8.17.

##### [해제일]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

###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5. 통상교섭본부, 『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 발족회의 (kick-off) 개최

- ✓ 『한미 글로벌 백신파트너십』 성과 창출 위해 국내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백신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백신 공급망 강화 집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8월 30일(월), 9:30 대한 상의에서 「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 발족회의를 개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성과 창출을 위한 산업통상 분야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우선 국내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글로벌 백신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백신공급망 강화에 집중 지원하기로 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직후 백신 원부자재 기업인 '이셀'을 방문해,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One Team Korea"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지원하고 글로벌 백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 내 「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지원 TF」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산업통상 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상교섭본부가 가진 57개국과의 다양한 FTA 네트워크 채널을 활용해 미국, EU 등 주요 국으로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글로벌 백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동 회의에서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속히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내 백신 원부자재 공급 기업과 해외 유수의 글로벌 백신 생산 기업 간 매칭을 통해 국내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 백신 공급망 편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해외의 우수 글로벌 백신 기업들 중 주요 타겟 기업을 선정하여 입지·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 해외진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글로벌 백신 공급망 편입을 통해 국산 백신 개발을 통상 측면에서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음.

또한 TF의 CVO(Chief Vaccine Officer) 팀장은 FTA 협상시의 중기 과제로 향후 FTA를 통한 백신 원부자재 관세인하, 국내 기업의 백신 생산 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 반영 등 다양한 FTA 통상 측면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동 회의에 참석한 한국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과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백신 소부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의 축적된 글로벌 FTA network와 국제협력 경험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향후 통상교섭본부는 「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를 통해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유관기관·업계와의 밀착 현장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과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국부창출형 통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